제주4·3 70년

어둠에서 빛으로

제2부

4·3진상규명운동의 성과

–

제1장 제주4·3특별법 제정

제2절 4·3특별법의 수난 / 양조훈

제주4·3평화재단
JEJU43PEACE FOUNDATION

2. 보수 진영의 4·3특별법 제동[3)]

1) 『월간조선』 기고문 파동

제주4·3이 오늘의 위상을 갖게 되기까지 많은 수난과 도전, 응전이 있었다. 4·3 진영은 2000년 4·3특별법 쟁취를 시작으로 정부 차원의 진상조사, 법정보고서를 통해 '국가공권력에 의한 인권유린'이란 새로운 규정 획득, 대통령의 사과, 국가기념일 지정, 화해와 상생이란 슬로건 개척 등 수많은 성과를 거두었다.

그런데 일부 보수 단체들은 이런 변화를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면서 극렬한 반대 운동을 벌였다. 수구적 냉전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한 세력은 과거 '공산폭동'으로 규정되어 지하에 갇혀 있던 4·3이 새로운 햇살을 받고 재조명되는 데 대해 강한 불만을 갖고 온갖 훼방·폄훼 활동을 전개했다.

그 시발은 4·3특별법 제정부터였다. 극우보수 단체에겐 4·3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이 목적인 4·3특별법 제정 자체가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일대 사건이었다. 1999년 12월 23개 보수 단체가 4·3특별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 직전에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특별법의 폐기를 주장했지만 타이밍을 놓치는 바람에 허공에 날린 빈주먹과 다름없었다. 4·3특별법 제정 직후 그들은 또 다른 반격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 첫 시도가 여론 조성을 위한 『월간조선』의 기고문 발표였다.

조선일보사에서 발행하는 시사 월간지 『월간조선』 2000년 2월호는 기고문의 표지 제목을 "국군을 배신한 대한민국 국회-공산게릴라들에게 면죄부를 주고 국군과 경찰을 학살범으로 정죄(定罪)"한 4·3특별법이라고 매우 선정적으로 달았다. 『월간조선』은 4·3특별법 제정을 신랄하게 비판하는 이진우 변호사의 '제주4·3사건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특별법의 국회 통과를 개탄한다'와 이현희 교수(성신여대)의 '제주4·3사건의 본질을 다시 말한다'는 기고문 두 편을 동시에 실은 것이다.

3) [제3부 제1장] 제2, 3절 참조(편집자 주).

이진우 변호사의 글은 섬뜩할 정도로 과격했다. 즉 “4·3특별법은 공산폭도들에게 면죄부와 함께 사랑의 꽃다발을 안겨주었고, 반면 이들의 폭동을 진압하기 위해 피와 땀 그리고 생명을 바친 대한민국 국군, 경찰관들에게는 ‘무차별 양민 대량학살’이라는 유죄 판결을 내렸다”는 게 그의 논지였다.

이현희 교수의 글은 왜곡 그 자체였다. “4·3은 소련 지령하에 대한민국 건국을 저지하

기 위한 유혈 폭동”이라고 당당히 규정하는가 하면 “4·3사건은 우리 민족의 현대사에서 동족이 벌인 공산당의 광란의 살육으로는 가장 처참한 사건으로서 많은 희생자를 냈다.” 는 주장까지 폈다.



「제주 4·3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특별법」의 국회통과를 개탄한다

國軍을 배신한 대한민국 國會

대한민국 국회는 공산게릴라들에게 면죄부를 주고 國軍과 경찰을 양민 대량 학살범으로 定罪하였다

李 珍 雨 변호사

「제주 4·3 사태의 성격을 「국가권력에 의한 무차별 양민 학살사건」으로 보는 4·3 특별법은 朴憲永과 金達三 등 1만9천여명에 이르는 공산폭도들에게 면죄부와 함께 사랑의 꽃다발을 안겨주었다. 반면 이들의 폭동을 진압하기 위하여 피와 땀 그리고 생명을 바친 대한민국의 國軍, 警察官들에게는 「무차별 양민 대량학살」이라는 유죄판정을 내렸다. 軍警과 요인을 죽이다가 訓練해 진입과정에서 사살된 人民解放軍이라는 폭도들의 영예를 대한민국 국회에서 회복시켜 준다는 말상이 어떻게 가능한가」

대한민국 정통성의 존定

「共產폭동」을 「무차별 양민학살 사건」으로 뒷뒤시키다

[그림 2] 『 월간조선』 2000년 2월호에 실린 ‘국군을 배신한 대한민국 국회’란 제목을 단 이진우· 이현희 기고문

그들의 글만을 읽은 독자들은 '도대체 대한민국 국회가 어쩌다가 이런 큰 실책을 했단 말인가'라는 우려와 의문을 던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더군다나 소련의 지령을 받은 공산당이 광란의 살육극을 벌여 수많은 희생자를 발생시켰다고 주장하는 판국이었다.

그동안 4·3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해 온 제민일보 4·3취재반은 이에 대해 즉각 반론에 나섰다. 하필 4·3취재반과 두 사람 사이에는 악연이 있었다. 즉 이승만 양자가 '불법 4·3계엄령'을 보도한 제민일보를 상대로 제기한 3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측의 대표 변론을 맡은 이가 바로 이진우 변호사였다. 또 고등학교 교과서에 4·3과 관련해 근거 없이 '북한의 사주'라는 표현을 썼다가 10여 년 전에 4·3취재반으로부터 호되게 추궁당한 이가 바로 이현희 교수였다.

4·3취재반 김종민 기자는 『월간조선』 조갑제 편집장에게 전화를 걸어 두 사람의 글이 역사적 사실 관계를 무시한 채 억측으로 점철된 궤변이라고 지적하고 반론 게재를 요청했다. 이에 조 편집장은 "4·3을 공산폭동으로 보느냐, 그렇지 않다고 보느냐. 그것부터 밝히라"고 다그치고는, "4·3이 '공산폭동'이라는 사실에 동의하지 않으면 지면을 줄 수 없다."며 반론 게재 요청을 거절했다.

결국 김종민 기자의 반론은 한겨레신문사에서 발행하는 시사주간지 『한겨레 21』(2000년 2월 24일자)에 '4·3이 공산 폭동이라니'란 제목을 달고 실렸다. 김 기자는 먼저 이 변호사의 주장에 대해 "4·3특별법 그 어디에도 '대한민국 국회가 공산 게릴라들 면죄부를 주고 국군과 경찰을 양민 대량 학살범으로 정죄한' 내용은 없다. 다만 진상을 규명하고 억울한 희생자의 명예를 회복시킨다는 대의명분이 있을 뿐이다."라고 지적했다.



4·3이 공산폭동이라니

<월간조선>을 향한 <제민일보> 4·3특별취재반의 반론

"4·3특별법과 제주도민들을 더이상 우롱하지 말라"

(사진/매년 거행되는 4·3사건 희생자 합동위령제. <월간조선>에 소개된 이진우씨의 주장대로라면 4·3 희생자들이란 소련의 사주에 따라 움직인 '공산분자'가 된다)

지난해 12월 제정된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특별법'은 한국현대사 최대의 비극인 4·3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실마리를 마련한 법률이다. 최근 <월간조선>은 이 획기적인 법률이 "대한민국 정통성을 부정"했다는 주장의 글을 실어 말썽을 빚고 있다. 이에 대한 <제민일보> 4·3취재반의 반론을 들어본다. 편집자

<월간조선> 2월호에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특별법>의 국회통과를 개탄한다'는 이진우 변호사의 글이 실렸다. 이 글에는 "국군을 배신한 대한민국 국회"라는 지극히 선정적인 제목이 붙었다. 이어지는 이현희 교수(성신여대)의 '제주 4·3사건의 본질을 다시 말한다'는 글에는 4·3사건이 "소련의 사주로 발발했다"는 어마어마한 주장도 있었다.

[그림 3] 『한겨레 21』에 실린 '4·3이 공산폭동이라니' 제하의 김종민 기자 반론문

김종민의 반론은 또한 6쪽에 불과한 이현희 교수의 짧은 글에서 무려 20여 군데의 오류가 발견되었다면서 그 허구성을 조목조

성을 조목조목 따졌다. 특히 논란이 됐던 '소련 사주설'의 진위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논박했다.

> 이현희 씨의 이번 주장은 남로당 중앙당 수준을 넘어, 북한·소련이 사주해 4·3사건이 발생했다는 것이니, 그게 사실이라면 매우 중요한 내용이 아닐 수 없다. 이씨는 그 근거로 '1946년 당시 소련은 김일성·박헌영 등에게 폭동의 시기와 전략적 지침의 하달은 물론 준비 및 진행자금까지 제공한 사실에 관한 소련의 비밀문건이 최근 한국의 일간신문사 조사취재팀에 의해 발굴된 바 있다.'고 밝혔다.
>
> 1946년에 있었다는 전반적인 내용의 소련의 지침과 구체적으로 1948년에 발발한 제주4·3사건을 바로 연관짓는 건 난센스지만, 매우 궁금한 대목이 아닐 수 없어 이씨에게 전화를 걸어 물어 보았다. 이씨는 머뭇거리다가 "중앙일보 현대사연구팀이 발굴한 자료에서 비슷한 내용을 본 것 같다."는 어처구니없는 답변을 했다. 논쟁을 벼르며 전화했지만 10년 전과 마찬가지로 오류 지적에 대해 하나도 제대로 답변을 못하니 허탈할 지경이었다.[4)]

2) '4·3특별법 위헌' 헌소 제기[5)]

2000년 4월 6일 보수 인사와 예비역 장성 출신 등 15명이 제주4·3특별법이 위헌이라면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이들은 "제주4·3사건은 공산무장반란인데, 4·3특별법은 가해자인 공산무장 유격대를 피해자인 경찰·양민들과 구별하지 않고 똑같이 위령토록 규정, 헌법의 자유주의적 기본질서를 위반하고 평등권 등을 침해했다." 고 주장하며 위헌심판을 청구한 것이다.

이들 청구인들 중에 눈길을 끄는 사람들이 있었다. 4·3 당시 서북청년회(서청) 중앙회장을 맡았던 문봉제, 전국학생총연맹(학련) 중앙위원장이었던 이철승, 박진경 연대장의 양자 박익주 등이었다.

4·3 당시의 서청은 제주도민들에게는 '악몽'으로 각인되어 있다. 이승만 정권 시절 교통부장관을 지낸 문봉제는 4·3진상규명이 사회 문제로 부각되던 1989년 한 잡지와의 인터뷰에서 "제주에서의 진압은 미군정하의 군인과 경찰이 한 것"이라고 발뺌하면서 "제주에서의 서청의 공과는 공반과반(功半過半)"이라고 표현한 바 있다. 그런 장본인이 헌소 청구인으로 나선 것이다.

국회의원 7선 출신인 이철승은 1970년대 DJ·YS와 더불어 40대 기수론을 내세워 야

4) 김종민, 「4·3이 공산폭동이라니」, 『한겨레 21』(한겨레신문사, 2000. 2. 24), 51쪽.
5) [제3부 제1장] 제2절-1. 4·3특별법 위헌 소송 참조(편집자 주).

당 대통령 후보 경선을 벌였던 인물이다. 그가 4·3 당시 중앙위원장을 맡았던 학련 역시 제주도에서는 그 잘못이 회자되는 집단이다. 자유민주민족회의 대표 자격으로 헌소 청구인에 참여한 그는 이에 앞서 3월 20일 한나라당 서울 광진을 지구당 개편대회에 참석, "4·3특별법은 4·3폭동을 정당화·합리화시키고 폭동 주동자들을 명예 회복시키려 하는 법"이라고 포문을 열었다. 독자들은 '서울 한복판에서 웬 4·3특별법 비난'인가 하고 의아해할지 모른다. 그러나 이 발언은 바로 이 지역구에 출마한 민주당 추미애 의원을 겨냥한 것이었다.

박익주는 육군 중장 출신이다. 제11·12대 국회의원(민정당)도 지냈다. 그는 4·3 당시 제주에서 부하에 의해 암살당한 제11연대장 박진경 대령의 양자이다. 그는 양부의 명예를 높이기 위해 준장 추서 운동도 벌였지만 성사시키지는 못했다. 그는 4·3특별법이 제정되자 누구보다 앞장서서 반대 운동에 나선 것이다.

이렇게 헌법소원심판 청구인 가운데 서청·학련 관련자까지 참여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제주 사회는 술렁이기 시작했다. 제주시민사회단체협의회(상임대표 임문철·김태성)는 4월 10일 성명을 발표하고 "서청·학련 책임자 등이 위헌소원을 낸 것은 학살 책임자들과 극우 세력의 최후의 몸부림이자, 사건의 진상이 공개되면 그 반인륜적 죄악상이 만천하에 공개될 것을 우려하는 위기의식의 발로"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런 논란의 와중에 2000년 5월 10일 예비역 장성 출신 모임인 성우회(회장 정승화)가 헌법소원심판 청구에 가세하면서 4·3특별법의 위헌 논쟁은 더욱 확산되었다. 장성 출신 333명이 서명한 성우회의 헌소 청구서에는 "4·3특별법은 청구인들의 기본권과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들은 "4·3사건은 남로당이 1948년 한반도를 적화하기 위해 제헌의원 선출을 저지할 목적으로 일으킨 폭동임에도 특별법은 이를 합법화해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라는 국가의 정체성을 파괴했다."고 지적하고 "국무총리 산하에 위원회를 둬 희생자의 심사 결정, 명예회복, 호적등재까지 자의로 할 수 있게 한 조항은 포괄위임입법금지 원칙을 위배했다."고 주장했다. 성우회는 특히 "특별법은 폭동 세력과 국가 공권력을 대등하게 위치시켜 공권력 행사의 적법성을 부인하고 있다."면서 노골적인 불쾌감을 드러냈다.

청구인 측 변호사는 날이 갈수록 늘어나 10여 명에 이르렀다. 대법관 출신인 정기승, 국회의원 출신인 나석호·이진우·이택돈 변호사 등도 합류했다. 그 중에도 4·3특별법 제정을 공박하는 『월간조선』 기고문의 파문을 일으켰던 이진우 변호사가 적극적으로 나섰다.

청구인 측 변호사들은 준비서면을 작성하면서 4·3특별법 문제의 출발점은 4·3사태의 기산일을 1948년 4월 3일로 하지 않고 '1947년 3월 1일을 기점'으로 잡은 데 있다고

지적했다. “그것은 목적의식의 소산이며, 그 목적이란 적화통일을 목표로 한 공산주의 폭동에 대하여 조국의 광복을 위한 민족의 3·1 저항운동과 같은 평가를 하기 위한 것”이란 색다른 주장을 펴기도 했다.

이에 맞서 행정자치부 고문 변호사인 배병호 변호사가 반론을 폈다. 정부나 국회, 4·3 진영까지 한편이 되어 청구인 측의 부당한 주장에 반박하는 논리를 폈고, 관련 자료를 제공했다. 2000년 12월 8일에는 청와대와 국무총리실, 행정자치부, 법무부, 국방부 등 정부 측과 국회 측 관계관 연석 대책회의도 개최됐다.

정부 측은 “청구인들은 ‘헌법 제37조가 규정하고 있는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주장을 펴고 있으나, 4·3특별법 전문을 살펴보더라도 청구인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조항은 어디에도 없을 뿐더러, 이것은 특별법의 제정 과정이나 입법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한데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헌법소원 청구의 요건을 갖추려면 원칙적으로 침해받은 기본권이 청구인 자신의 것이어야 하며, 현재 그리고 직접 침해당한 경우여야 하는데, 4·3특별법에는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규정이 없는 데다 청구인들이 제시한 청구 이유에서도 침해의 자기 관련성이 충족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정부 측은 또한 “4·3특별법 제5조 ‘불이익 처분 금지’ 조항과 제2조의 ‘무력 충돌’ 등의 용어를 두고, ‘적군과 아군을 동등시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존재 의의 자체를 부정할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나, 특별법에는 반란 세력을 국가 공권력과 대등한 지위로 위치시킨 사실이 없으며, 또한 ‘무력 충돌’이란 용어에 상당히 거부감이 있는 것으로 보이나, 그 용어는 법률용어로서 국가 공권력 사이의 충돌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착된 바가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서 “청구인들의 논리대로라면, 만일 국가 공권력에 의한 민간인 학살 등 불법행위가 있더라도 이를 수정할 수 없고, 국가 공권력의 행위는 언제나 적법하다는 논리의 모순을 빚을 수 있다.”는 주장도 폈다.

헌법재판소는 두 가지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병합 심리한 끝에 2001년 9월 27일 위헌심판 청구를 각하 결정했다. 즉 청구인들의 기본권 침해 주장에 대해서 4·3특별법에 그들의 직접적인 침해 규정이 없고, 자기 관련성이 없다는 청구의 부적격성을 판시한 것이다.

3) 4·3위원회 폐지 논란

2008년 이명박 정부가 출범했다. ‘김대중-노무현’ 대통령으로 이어지던 민주정부 10

년을 마감하고 이명박 대통령의 보수 정권이 돛을 올린 것이다. 겨우 제자리를 찾던 4·3 진실 찾기와 명예회복 운동도 이때부터 시련을 맞게 됐다. 보수 진영의 조직적인 반격이 시작됐기 때문이다.

보수 진영은 자기들 세상을 만난 양 의기양양하게 김대중·노무현 정권에서 이루어낸 과거사위원회의 성과물들을 한꺼번에 뒤엎을 기세였다. 다른 과거사위원회의 성과물에 대해서도 공격했지만 가장 화력을 집중시킨 것이 이념적 쟁점이 많았던 바로 4·3이었다.

그들의 공격 목표는 제주4·3위원회의 폐지, 4·3진상조사보고서의 폐기, 4·3희생자 결정의 무효화, 4·3평화기념관의 개관 중지로 모아졌다. 한마디로 그동안 4·3특별법 제정 이후 차근차근 진행되어 온 4·3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조치의 공든 탑을 한꺼번에 무너뜨리겠다는 심사였다.

그 시발은 엉뚱하게도 새해 벽두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부터 터져 나왔다. 그해 1월 4일 대통령직인수위는 행정자치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정부 산하 위원회를 대폭 정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밝혔다. 인수위는 우선 과거사 관련 위원회 14개와 국정과제 관련 위원회 12개 등 26개 위원회를 폐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 폐지 대상위원회 속에 4·3위원회가 포함되면서 제주사회가 벌집 쑤신 듯 들끓기 시작했다.

한창 화해와 상생의 길을 걷던 제주 지역에서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첫 포문은 제주도내 14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제주4·3민중항쟁60주년 정신계승을 위한 공동행동준비위원회’가 열었다. 이 단체는 1월 5일 성명을 발표하고 “금년은 4·3 60주년을 맞는 해여서 각계각층에서 이에 대한 준비가 한창인데도 이명박 정부는 출범하기도 전에 4·3문제를 하찮은 것으로 여기는 행보를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1월 6일에는 4·3유족회와 4·3도민연대 등 4·3 관련 단체들이 나서서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는 지난 대선 기간 동안 제주도민과 약속했던 4·3 관련 공약을 잊었느냐”고 반문하고 대통령직인수위가 밝힌 4·3위원회 폐지 방침이 확실한 것인지 그 진위를 밝히라고 촉구했다.

이런 단체들의 반발에 한나라당 제주도당이 무마 작업에 나섰다. 제주도당은 1월 7일 밝힌 성명을 통해 “4·3위원회는 4·3특별법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이기 때문에 위원회를 없애려면 4·3특별법을 폐지하거나 개정해야 한다.”면서 “4·3위원회가 개별법에 따라 설치된 조직인 데다 활동의 독립성이 보장된 기구라 정리 결정이 쉽지 않다.”고 밝힌 것이다. 그러니 “자의적인 판단으로 여론을 호도하지 말라”고 피력했다.

그것은 맞는 말이었다. 4·3위원회를 폐지하려면 4·3특별법을 폐기하거나 개정해야 했다. 한나라당 제주도당의 염원과 달리 중앙당은 그 길을 준비하고 있었다. 한나라당

중앙당은 1월 21일 한나라당 국회의원 130명 전원이 발의한 45개 법률 제·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 속에는 4·3특별법 개정 법률안도 포함되어 있었다. 개정 골자는 4·3위원회를 폐지하고, 남은 업무는 '진실화해위원회(이하 '진화위')'에 통합시켜 수행하도록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속내를 들여다보면, 이명박 정부의 과거사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그대로 깔려 있었다. 과거사위원회 가운데는 법으로 존치 기한이 명시된 곳과 그렇지 않은 곳이 있다. 한나라당은 존치 기한이 명시된 5개 위원회를 우선 폐지하고, 존치 기한이 명시되지 않은 4·3위원회 같은 9개 위원회는 진화위로 통합했다가 나중에 폐지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은 것이다. 진화위도 2010년 10월이면 문을 닫는 청산절차를 밟게 되어 있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서 4·3 관련 단체만이 아니라 제주도청년연합회 같은 일반시민단체, 제주도와 도의회, 야권 정치권 등이 나서서 아직 출범도 하지 않은 이명박 정부에 대한 총공세에 나섰다. 1월 30일에는 4·3유족회 회원 3백여 명이 4·3위원회 폐지 법안 철회 촉구 궐기대회를 가졌다. 김두연 회장 등이 두건을 쓰고 상여를 메어 시가지를 행진하는 특별한 시위도 벌였다. 상경 투쟁도 이어졌다.

총선을 코앞에 둔 한나라당 제주도당은 난감하지 않을 수 없었다. 제주도당 임원진은 2월 4일 중앙당사를 방문, 격앙된 제주 현지 분위기를 전하고 4·3위원회 폐지 방침 재검토를 요구했다. 이런 노력의 결과인지 여야의 협상 과정에서 4·3특별법 개정 등은 나중에 다루는 것으로 정리됐다.하지만 그해 4월 열린 총선에서 제주지역에선 민주당이3석을 모두 휩쓸었다. 집권 여당인 한나라당이 제주에서는 완패한 것이다. 언론은 제주에서 한나라당이 완패한 이유에 대해 4·3 60주년을 맞는 시점에서 여권이 무리하게 시도한 4·3위원회 폐지 등이 지



"4·3위원회 폐지 법안 철회하라"

4·3단체 어제 궐기대회…도연합청년회도 기자회견 반발

4·3 위원회 폐지 법안과 관련해 도내 단체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제주4·3희생자유족회 및 관련 단체 회원 300여명은 30일 제주시 관덕정 앞에서 4·3위원회 폐지 법안 철회를 주장하는 궐기대회를 열었다.

이들은 이날 오전 9시30분에 열린 제주4·3희생자 유족회 정기총회 및 4·3유해발굴 설명회에 참석한 뒤 하니관광호텔에서 관덕정까지 상여를 매고 가두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께 드리는 건의서'를 통해 "4·3위원회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배제하고 다른 위원회에 이관하는 조치는 용납할 수 없다"며 "4·3위원회가 존치돼 4·3의 진상을 밝힐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한나라당은 제주 4·3 사건 진상 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라"며 "4·3 사건 발생 60년만에 희생자와 유족들을 두번 죽이고 있다"고 강력히 항의했다.

이에앞서 이날 오전 10시 제주특별자치도 연합청년회 회원들은 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4·3 위원회 폐지 방침을 중지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이들은 "4·3의 상처가 서서히 아물고 화해와 상생의 걸음마를 내딛는 시점에 4·3 위원회 폐지 문제가 국회에서 거론되고 있다"며 "이는 운영의 효율성이란 허울을 쓰고 나타난 또다른 4·3 학살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일부 단체에서 정부가 공식 인정한 희생자를 폭도로 규정하고 4·3 평화공원을 폭도공원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묵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어떤 정당도 4·3 특별법 개정발의를 해서는 안되고 국회 역시 4·3 특별법 개정 법률안을 부결시켜야 한다"며 "4·3 위원회가 4·3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때까지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해 싸워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동은 기자 kde@jemin.com

[그림 4] 제민일보, 2008. 1. 31

역 정서를 자극했다고 분석했다. 그런 분석은 상당히 신빙성이 있었다.

그러다가 그해 11월부터 한나라당 일부 의원에 의해 4·3위원회 폐지를 목표로 한 4·3특별법 개정 작업이 또다시 착수되었다. 이에 맞서 제주 사회에서는 '한나라당 제주 4·3특별법개정안반대범도민대책위원회'가 발족되었다. 이 대책위에는 모두 49개 단체가 참여했는데, 일부 보수 성향의 단체도 동참했다. 제주 도내에서 이렇게 많은 단체가 한 목소리를 낸 것은 매우 드문 일로, 4·3운동사에 새로운 기록을 세운 이례적인 현상이었다.

그만큼 제주도민사회에서는 4·3에 관한 한 과거로의 회귀를 원치 않는 분위기가 어느덧 터잡고 있음을 확실히 보여준 사건이었다. 결국 한나라당은 이런 반발에 부딪쳐 끝내 4·3위원회를 폐지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하지 못했다. 다만 2009년에 와서 행정안전부 산하 기구인 4·3지원단을 폐지하고, 남은 업무는 과거사지원단에서 대신 처리하는 것으로 실무기구를 축소 조정했을 뿐이다.

한편 2008년은 4·3 발발 60주년을 맞는 해여서, 그해 2월 취임한 이명박 대통령의 4·3희생자 위령제 참석 여부가 초미의 관심을 끌었다. 특히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초기 활동 때 4·3위원회의 폐지안을 들고 나오면서 한바탕 소동이 벌어진 후라서, 민심을 달래기 위해서도 대통령의 위령제 참석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돌았다.

그 스타트는 4·3희생자유족회에서 끊었다. 4·3유족회는 3월 7일 기자회견을 갖고 이명박 대통령의 위령제 참석을 공식 청원했다. 김태환 도지사도 3월 18일 청와대를 직접방문해 대통령의 위령제 참석을 건의했다. 이어서 여야 정치권, 4·3 관련 단체들이 한 목소리로 대통령의 참석을 공개적으로 요청했다.

대통령의 초청에 가장 공을 들인 사람은 누가 뭐래도 제주 지역에서 총선에 출마한 한나라당 후보들이었다. 그해 4월 9일 벌어질 총선을 코앞에 둔 이들 후보들은 이반된 민심을 돌리기 위해서도 대통령의 4·3위령제 참석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여러 경로를 통해 그 절박성을 호소했다.

이런 노력에 의해 이명박 대통령의 4·3위령제 참석 방침이 굳어졌다. 청와대로부터 이런 방침을 전달받은 제주도는 난리가 났다. 위령제 참석 예정자의 비표를 발행하기 위한 신원 확인 작업에 돌입했다. 6천~7천 명의 참석 대상자 신원을 파악하느라 도청 의전 파트와 4·3유족회 등에는 비상이 걸렸다. 그런 준비 과정을 거쳤음에도 그해 이명박 대통령의 4·3위령제 참석은 결국 불발되고 말았다.

새 정부가 출범하게 되자 여러 경로의 실세들이 등장했다. 그 중에도 막강한 세력은 이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의원 진영과 이 대통령과의 대학 동기인 천신일 회장이 이

끄는 고려대학교 교우회를 세칭 양대 산맥으로 불렸다. 그런데 운명의 장난처럼, 제주 지역구 후보의 건의를 받은 이상득 의원은 대통령의 위령제 참석을, 그러나 막판에 보수 단체들의 집중적인 건의를 받은 교우회 쪽은 위령제 불참을 권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4월 3일 4·3위령제가 봉행되던 날, 이명박 대통령을 대신해서 한승수 국무총리와 원세훈 행정안전부 장관이 제주에 내려왔다. 한 총리는 제주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정보를 사전에 보고받고 있는 터라, 매우 신중히 행동했다. 한 총리는 추도사에서 "4·3은 건국의 혼란기에 있었던 비극이며, 유가족과 도민 여러분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어 "정부는 4·3의 진실을 역사의 교훈으로 삼아 나가는 데 정성을 다하고 기념사업과 유족 복지사업 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한나라당은 강재섭 대표가 직접 내려와 민심을 수습하려고 노력했다. 그러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은 일주일 뒤 벌어진 총선에서 제주 지역구 국회의원 3석 모두를 통합민주당에 넘겨주는 참패를 당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시절인 2007년 3월 2일 4·3평화공원을 참배한 뒤 "4·3에 대한 평가는 제대로 됐으며, 평가대로 인정해야 한다."는 말을 남겼다. 그러나 대통령이 된후 5년 동안 한번도 4·3 위령행사에 참석하지 않아 유족들의 마음에 서운함도 남겼다.